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9월 18일

제07-43호

[상세 내용]

EU 경제 동향 및 전망(2007년 2분기)

김 흥 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팀장 (hckim@kiep.go.kr, Tel: 3460-1036)

김 균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Tel: 3460-1064)

주요 내용

- ▣ 2006년 이후 경제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EU 경제는 2007년 2분기에 전기대비 0.5% 성장하여, 예상보다 약간 저조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0.7~1.0%(전기대비 기준)의 높은 고성장을 기록했던 2006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음.
 -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주요국들의 민간소비와 수출의 둔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주요 원인임.
- ▣ 2007년 EU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동향, 세계경기 상승 여부, ECB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경제개혁 추진 등이 있음.
- ▣ 2007년 EU 경제는 2.9%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경기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확대에 제약이 가중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1. EU 최근 경제동향

- 2006년 EU27과 EA13(Euro Area, 유로지역)¹⁾ 경제는 각각 전년대비 3.0%와 2.8% 성장하여 2001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6년 EU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수출부문 호조와 기업투자 확대가 주도한 것임.
- 총고정투자가 전년대비 5.6%, 수출이 9.2% 증가하면서 EU27 경제성장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가계소비 증가율도 5년 만에 최고치인 2.2%를 기록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07년 1분기에 전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하며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했던 EU27 경제는 2분기에 들어 전기대비 0.5%, 전년동기대비 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음.
- 이는 전반적으로 분기별 성장률이 0.7~1.0%(전기대비 기준)의 높은 고성장을 기록했던 2006년보다는 낮은 성장률임.

표 1. EU27 및 주요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6		2007	
				3/4	4/4	1/4	2/4
EU 27	2.5	1.8	3.0	0.7	0.9	0.7	0.5
EA 13	2.0	1.5	2.8	0.6	0.9	0.7	0.3
독 일	1.2	0.9	2.8	0.7	1.0	0.5	0.3
프 랑 스	2.5	1.7	2.0	0.1	0.4	0.5	0.3
이탈리아	1.2	0.1	1.9	0.3	1.1	0.3	0.1
스 페 인	3.2	3.5	3.9	0.9	1.2	1.1	0.8
네덜란드	2.2	1.5	3.0	0.5	0.7	0.7	0.2
영 국	3.3	1.8	2.8	0.7	0.8	0.7	0.8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Eurostat.

1) 유로지역(Euro area)은 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Monetary Union)에 가입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기존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이었으나 2007년 1월 슬로베니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3개국임. 또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금년 1월 EU25에 가입하여 2007년 현재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확대됨.

- 2007년 2분기 EU27의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주요국들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임.
 - 2006년 분기별 성장률이 전기대비 0.7~1.2%를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독일경제는 2007년 1분기에는 0.5%, 2분기에는 0.3% 성장하며 최근 올수록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상이 가계소비지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지난 겨울 온난한 기후로 활황을 보였던 건설부문의 성장이 2분기에는 둔화되면서 상반기 독일경제가 다소 부진하였음. 그러나 2분기에도 여전히 수출과 기업의 자본재 투자는 꾸준히 확대되어 독일경제의 회복세를 이끌어 가고 있음.
 - 2006년 하반기부터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경제는 2007년 2분기에도 전기대비 0.3% 성장하였는데, 이는 2분기 순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기업투자도 위축되었기 때문임.
 - 이탈리아 경제의 2분기 성적은 더욱 저조하여 전기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2006년 4분기 1.1% 성장 후 2007년 1분기에 0.3%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분기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네덜란드 경제도 기업투자 부진으로 2분기에 전기대비 0.2% 성장률을 기록, 2007년 1분기의 0.7% 성장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음.
 - 반면 기업투자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지만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이 호조를 보인 영국과 스페인은 같은 기간 전기대비 0.8%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음.
 - 유로화 강세 및 고유가 등은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산업생산 확대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또한 기업투자와 수출확대에 영향을 미쳐 2분기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둔화됨. 다만 민간소비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
- 그 동안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고정투자와 수출부문이 EU27의 경기회복을 주도해 왔으나, 세계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부문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고 있음.

- 2007년 1분기 EU27의 투자부문 증가율은 전기대비 2.1%를 기록하며 EU27 경기회복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06년 4분기에 전기대비 2.9% 증가했던 수출부문이 2007년 1분기에는 0.8% 증가하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음.
- 가계소비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있지만, EU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 등에 따른 불안감의 상존으로 개인소비 증가가 둔화되고 있음.

표 2. EU27 및 EA13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증가율)

	EU27				EA13			
	2006			2007	2006			2007
	2/4	3/4	4/4	4/1	2/4	3/4	4/4	1/4
가계소비	0.6	0.6	0.6	0.2	0.3	0.7	0.4	0.0
정부소비	0.1	0.5	0.5	0.6	0.2	0.6	0.4	0.8
투 자	2.2	1.2	1.9	2.1	2.2	0.9	1.5	2.4
수 출	1.1	-0.1	2.9	0.8	0.9	1.4	3.3	0.8
수 입	1.5	0.0	1.5	1.6	0.8	2.0	1.6	1.7
GDP	0.9	0.7	0.9	0.7	0.9	0.6	0.9	0.7

자료: Eurostat.

- 한편 노동시장의 경우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2006년 7월 7.9%였던 EU27의 실업률이 2007년 7월에는 6.8%로 하락하였음.
- EA13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 6.9%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1993년 유로지역의 실업률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임.
- 그러나 국가별 실업률은 덴마크의 3.2%에서 슬로바키아 10.6%까지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네덜란드(3.4%), 키프러스(4.1%), 오스트리아(4.3%)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 중인 반면, 폴란드(9.7%), 프랑스(8.5%), 포르투갈(8.2%) 등은 8% 이상의 높은 실업률을 기록 중임.
- 7월 EU27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 유로지역은 1.8%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최근 급속히 상승하여 물가상승에 위협이 되고 있음.
- 유럽의 경기회복이 2006년 상반기의 고유가와 맞물려 물가불안을 심화시킴에 따라 2006년 중순에는 유로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5%에 달했음.

- 그러나 2006년 9월 이후에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이 2% 이하로 낮아져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 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07년 1월 배럴당 50달러였던 유가가 8월에는 80달러에 근접하면서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와 더불어 임금도 안정 기조²⁾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유로화가 1.3852달러에 거래되어 1999년 1월 유로지역 출범 이래 달러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음.
- 유럽경제가 2001년 이래로 최고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2007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이 2007년 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상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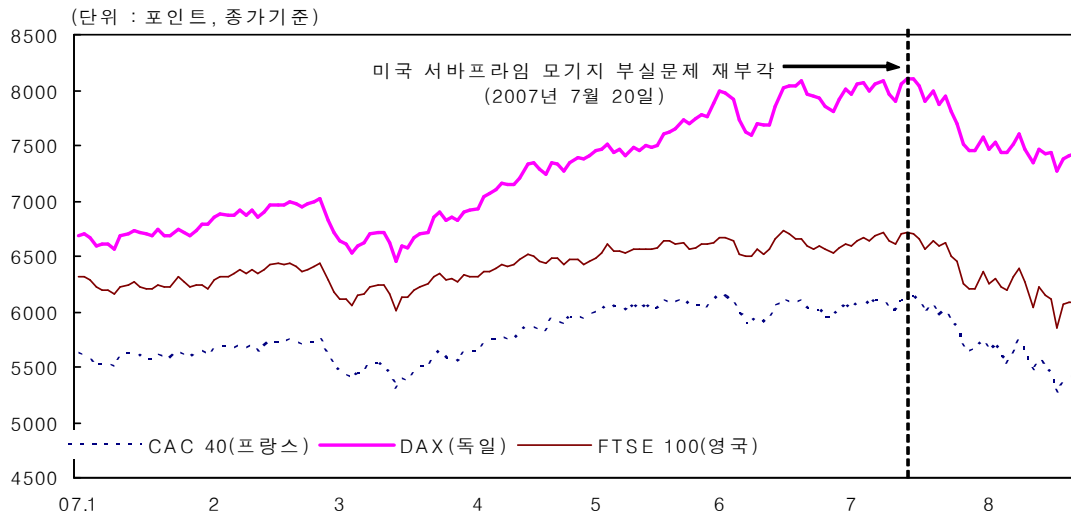
2. EU 경제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가. 서브프라임 사태(sub-prime crisis)

- 8월 9일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12억 유로(22억 달러) 규모의 3개 자산유동화(ABS)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이 급속히 확산됨.
- 유럽중앙은행(ECB)은 서브프라임 채권에 투자한 유럽계 금융기관들의 부실 확대에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유럽에서의 서브프라임 문제 확대 가능성 등을 주시하며 8월 9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총 2,8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투입하였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다시 부각된 2007년 7월 20일 이후 유럽의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음(그림 1 참고).

2) 2004년부터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동구권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자, 노사 양측은 추가적인 임금지급 없는 근로시간 연장(주당 35 → 39 또는 40시간) 및 임금인상의 억제 등에 합의함.

그림 1. 유럽 주요국 주가지수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 EU 집행위는 8월 16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관련한 신용평가 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함.
-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및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³⁾이 있음.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은 회복기에 있는 EU 경제에 충격을 주어 민간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축소 등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EU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문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실물부문은 여전히 견실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그동안의 경기활황에 따른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어 큰 규모의 자금차입 없이도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한 상황임.

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 유럽중앙은행(ECB)은 2003년 6월 이후 2년 반 동안 2%였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4.0%로 인상하였음.

3) 실제로 일부 신용평가 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에 대해 가장 안전한 자산을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같은 매우 높은 등급을 주기도 했음.

- 고유가와 원자재 및 농산물의 가격 상승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6년 8월까지 지속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였기 때문임.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6년 9월 이후부터는 2%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나 EU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서브프라임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물가상승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ECB의 금리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당초 금년 9월로 예상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10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ECB가 어느 선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거의 정점에 이른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향후 ECB의 금리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다. 회원국의 재정적자

- 유로지역의 경기회복과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주요 회원국의 재정적자 수준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EU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은 재정적자가 2003년 이래 GDP의 3%를 초과하여 EU 안정·성장협약(SGP)⁴⁾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
- 2006년에 와서 프랑스와 독일의 재정상황은 뚜렷이 개선되었는바, 독일의 경우 경기상승 지속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2005년 GDP의 3.2%였던 재정적자가 2006년에는 1.7%로 떨어졌으며, 프랑스도 재정적자가 2005년 GDP의 3.0%에서 2006년에는 2.5%로 낮아졌음.

4)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들이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한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재정 상태는 우려할 만한데,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는 2005년 GDP의 4.2%였으나 2006년에는 오히려 4.4%로 상승하였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GDP의 6.1%에서 3.9%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안정성장협약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 더욱이 이들 국가 모두 경기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의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독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독일정부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등 재정적자 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원국들의 재정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라.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정책

- 독일, 프랑스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가 핵심 내용이며 이에 따른 미래의 불안감은 민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메르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일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임.
 - 노조의 경영 참여를 축소하는 한편 6개월이던 수습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 정책이 추진됨.
 -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07년 2월 2일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3월 9일에는 연금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차 높이는 연금개혁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음.
 - 또한 독일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39%인 현 법인세 수준을 2008년까지 30% 이하로 감축하는 세법 개정안도 2007년 3월 14일 의회에서 통과됨.
- 지난 2006년 4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도입이 좌절된 바 있는 프랑스는 2007년 5월 6일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주당 35시간 근로제 개편, 감세정책, 사회복지 개혁 등의 경제개혁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노동시장 유연화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과 이를 위해 현재의 종신제보다 유연한 단기계약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 근로 및 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2007년 10월부터 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인하할 계획임.
- 소비파급 효과가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상속세 면세 가구대상을 현재 70%에서 95%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2007년 7월)하는 등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요위축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함.
- 한편, 주요국들의 경제개혁은 사회보장 축소뿐만 아니라 친기업적 정책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한 투자확대와 고용증가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슈뢰더 전임 총리의 Agenda 2010 그리고 메르켈 현 총리의 개혁정책 추진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켜 독일경제 회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마. 기타 요인

- 경기회복세에 따른 고용증가와 이로 인한 임금의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구매력이 증가하여 인해 가계소비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음.
- 반면에 유로화 강세 현상 및 세계경기 확대의 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로지역의 경쟁력 및 수출에 부담을 줘 유럽기업의 투자와 고용위축을 불러 올 위험이 있음.
- 그러나 유가불안 현상과 세계경기의 부진, 그리고 유로화 강세 등은 EU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EU 경제가 급격한 경기하강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정치적 불확실성도 EU 경기확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바, 독일의 대연정 내의 견 불일치, 프랑스 대선 후 경제개혁을 둘러싼 갈등 증대 등은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3. EU 경제전망

- 2007년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최근 경기상황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EU와 유로지역의 경기는 여전히 양호하여 2007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산업통상부의 2007년 4~5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독일 기업의 투자계획이 16%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1~2월 조사 결과인 13%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199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임.
 - 유럽통계청이 8월에 발표한 6월의 EU27 제조업부문 신규주문 증가율도 전월대비 4.9%를 기록하여 2007년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EU 집행위원회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5년 8월 최저치에서 점차 상승하여 금년 7월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데다가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가계소비의 급격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 2007년 EU27의 경제성장률은 2.9%, EA13은 2.6~2.7%로 예상됨.
- 2006년에 호조를 보였던 EU27 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회원국들의 긴축재정정책, 유로화 강세, 세계경기의 하락세 및 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2007년 말부터는 경기확대에 제약이 점차 가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8년 EU27 경제성장률은 2.4~2.7%, 유로지역은 2.2~2.5% 정도로 2007년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EU 경제성장률 예측치

(단위: %)

예측기관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World bank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EU - 27	2.9	2.7	2.9	2.4	-	-
EA - 13	2.6	2.5	2.7	2.2	2.6	2.5
독 일	2.5	2.4	2.9	2.5	2.6	2.4
프 랑 스	2.4	2.3	2.0	1.7	2.2	2.3
이탈리아	1.9	1.7	1.7	1.4	1.8	1.7
네덜란드	2.8	2.6	3.0	2.3	-	-
스 페 인	3.7	3.4	3.8	2.8	3.8	3.4
영 국	2.8	2.5	2.9	2.3	2.9	2.7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Economic forecast, Spring; Global Insight(2007), Online Analysis, August; World bank(2007), World Economic Outlook(update).(July)